

# 2008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 목차

1	'08년 국정감사 총평 (국회의원 이종혁)	1
2	'08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성과	5
3	'08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10
4	'08년 국정감사 이종혁 의원 언론보도	58

# ‘08년 국정감사 총평

●● 국회의원 이종혁



##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치고..."

### 1.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의의

일반적으로 국정감사라 하면,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일컫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 운영을 관장하는 위원회이므로 '국회사무처'를 소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전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대통령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그 소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예산권, 입법권 등을 쥐고 있는 국회에 대해 감사원 등 행정부가 '국회사무처'에 대해 내설있는 감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국회사무처'의 운영에 대해 국민의 눈으로 면밀하게 점검이 가능한 유일한 감사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지식경제위원회' 등 특정 상임위는 해당 소관사업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는 전 정부부처를 아우르며 주요 정책 방향 및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상임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2.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분야

첫째,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

최근 국회가 제출받은 ‘공무원범죄처분통고’가 무려 26건에 달하고, 이에 대한 징계 역시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자체심사 강화, 감사관실 혁신 조치를 강력 주문하였다.

그 결과, 국회사무처는 자체감사시스템을 부서별 집중감사 체제로 일대 혁신토록 조치하였으며,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올해안에 마련하여 시행기로 약속하였다.

둘째,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현 정부의 ‘미래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방향을 집중 점검하였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연구회 회장>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실천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여, 미래성장동력 육성의 실질적 사령탑이 될 대통령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다.

### 3. 국회운영위원회로서 국정감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일부 상임위에서 정쟁과 파행으로 국감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언론 등을 통해 집중 부각되면서, ‘국감무용론’까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번 국감에서 쌀 직불금과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적발해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국감 중에 찾아내고, 국정조사까지 시행하는 것을 보면 국정감사가 무용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감사 제도’는 ‘유용’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행정부와 국회사무처를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최근 불거진 ‘국감무용론’을 근거로 하여, 일부에서는 격년제 국감제도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면 깊이가 얇은 국감이 될 우려가 많고, 국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

그러나, 지식경제위원회 사례처럼 20일 동안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식의 현행 국정감사 제도는 부실감사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대안은 연중 상시국감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슈별 집중감사제를 채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4. '08년 국정감사 이후 소감

'효용성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행정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정책국감'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면서, 직원들과 새벽불을 밝힌 날도 많았다.

성실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감사 기간 동안 100% 출석율을 기록하였으며, 이석도 최대한 자제하고,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기관장의 답변에 귀기울여 이를 보충질의, 종합감사 등에 중요한 자료로 참고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국감을 통해 수많은 정부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과거에 비해 정부정책의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행정부의 과오를 잡아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상응해 국회의원의 자질과 국정감사의 질이 함께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국정감사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정책대상이 되는 일선 기업들과 국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과 함께 살아 숨쉬는 '위민(爲民)국감'을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

## ‘08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성과



이종혁 의원 '08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성과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공직기강 해이 심각 지적  
물품관리 실태 지적 및 위법 상황 개선 요구



국회사무처 자체감사시스템 일대 혁신 추진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마련

<대통령실>

바이오 산업, 대통령 주도의 전략적 육성 촉구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약속

##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주요 성과

### ■ 이종혁 의원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지적

- 국회사무처의 방만한 예산집행과 허술한 인력관리 추궁
- 이종혁 의원은 국회사무처의 ‘연말 예산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과 ‘주요물품 정수채정기준’ 부재로 인한 위법상태 지적.
  - 자료분석을 통해, ‘07년 자산취득비의 46%를 4분기에 집행하였으며, 12월 31일날 124건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 집행 질타
- 또한, 이종혁 의원은 그동안 국회사무처의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집중 추궁.
  - 최근 2년간 국회가 검찰로부터 받은 ‘공무원범죄처분통고’가 무려 26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관련자 징계는 솥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솥방망이 징계 관행이 공직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음을 지적.
  - 감사관실의 책임방기로 인해 국회자체감사시스템은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06년 이후 단 한차례의 자체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밝혀냄.
- 이에 이종혁 의원은 그동안 국회사무처가 예산권을 무기로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지적하며, 자체심사 강화, 감사관실 혁신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함.

## ■ ■ 국정감사 성과

- 이종혁 의원의 질의로 국회사무처 자체감사 시스템 및 공직기관 확립의 제도화를 위한 일대 혁신이 단행됨.
  
- 현재까지 연 2주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무처 전 부서를 일괄 감사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월 1, 2개 부서씩 묶어 집중해서 살펴보는 부서별 집중감사체제로 전환토록 방침 확정
  -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보다 심도있는 전문적인 감사가 가능해짐.
  
-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올해안에 마련 시행 확답.  
그동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회규칙의 미제정으로 동 규칙에 근거를 둔 국회공무원의 행동강령이 부재한 상태였음.
  
- 물품관리에 대한 위법상황 지적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 추진 약속
  - 국회사무처는 『물품관리법』에 따른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대통령실 국정감사 주요 성과



### ■ 이종혁 의원 ‘대통령실’ 국정감사 지적

#### ○ 바이오 (장수의학, 인공장기, 항노화)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필요성 역설

1.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수의학을 마치 의료, 복지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 대통령실의 역할은 없음을 지적.
  -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전통산업 만이 아니라, 항노화 (안티 에이징), 장수의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해답이다. 장수의학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며, 관광레저단지와 결합하면 대단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2. 우리나라도 예방의학과 전문의학 등 장수의학 메디컬 단지와 R&D 단지를 설립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관광레저와 세계적인 장수의학센터를 설립한 뒤 전 세계의 돈 많은 고령 고객들을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항노화· 장수의학과 관광레저가 융합된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요구.

### ■ 국정감사 성과

#### ○ 대통령실에서 바이오산업의 육성이 필요함을 인식함.

-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는 ‘경제강국’이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위하여 기술역량 확충이 필요하고,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

## ‘08년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 ‘08년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질의 목차

### 1) 사무처 직원 옷값에 국민혈세 6억원 낭비

전직원 70% 대상, 매년 20만원 정도의 교환권 지급  
종합의류 쇼핑몰 지정, 맘대로 쇼핑

### 2) 국회사무처 연말구입 물품, 혼수용품 방블

12월 31일 하루 동안 1억 8천만원어치 구입  
와인냉장고, 휴대폰 구입까지 지원  
10~12월 흑한기 앞두고 선풍기, 냉방기 구매

### 3) 감사사각 지대, 낮뜨거운 국회 천태만상

국회사무처 직원부터 공직기강 바로 서야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등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 의사진행발언 >

국회 자료제출요구권 앞장서 무시하는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구태, 근본적인 혁신 필요

<국회사무처 자료요구권 무시 천태만상>

- 국회사무처는 “국가정보기관”인가?
  - 개인 정보를 사유로 실명제출 거부
  - 『공무원범죄수사통고서』 자료요구에 대해서 실명, 직급 관련 정보 일체 누락
  - 더욱 한심한 것은, 국비지원으로 해외대학원에 진학한 현황, 일반 계약직 등에서 정규직 등으로 이동 현황 등의 어디에나 공개됨이 마땅한 자료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성명을 모두 의도적으로 ooo 처리하여 제출.
  - 그 어느 피감기관도 일반적 업무처리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명을 가려 제출하는 경우는 없었음.
  
- 최근 3년간 흡연단속 현황
  - “있다, 없다, 있으면 몇 건이다” 정도의 단순 자료요구
  - '08.10.21(화) 자료요구서를 공식 전달하고, 08.10.24(금)까지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감 전날인 08.10.29에서야 메일로 제출됨.
  
- 자료제출거부
  - 직원 징계심의의결서 사본,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거부

○ 국정감사 당일 오전에 자료제출하거나 미제출한 자료 수두룩

- 해외연수 관련 부속서류 국정감사 당일 오전 제출  
(자료제출요구 10일도 지난 시점임)

○ 자료 작성 부실 심각

- 표를 특정하여 정확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추지 않은 경우가 태반
- 자료제출을 위한 여러 조건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이를 무시.  
(예컨대, 국외 장기훈련 현황에서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근속기간 등을 함께 요구했으나, 해당 자료는 전부 제출하지 않음.)
- 때문에 받은 자료가 쓸모없는 데이터가 된 것이 상당수임.

○ 국감 이틀 전 자료요구 관련

- 보통 국정감사 기간을 하루 이틀에 앞둔 급박한 시점에는, 추가 자료요구에 대해 대부분의 피감기관 등은 당일 제출하거나, 익일 오전 중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
- 그만큼 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검토가 필요하고, 어렵지만 이에 대해 최대한 배려하는 것.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회신부터 함.

□ 발언

○ 국정감사를 수감 받는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태도가 이리함을 '사무총장'님이 아셔야 할 것임.

- 국회가 '감사 사각지대' '최후의 성전' 등 입법권과 예산권을 무기로 한 '육상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외부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과 함께 행정부의 일대 혁신을 주문하며, 전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감사 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해가고 있음.
- 사무총장님은 국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분. 국회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기구인 바, 국회사무처의 혁신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 국회사무처 등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 국회사무처 직원 옷값에 국민혈세 6억원 낭비

전직원 70% 대상, 매년 20만원 정도의 교환권 지급

종합의류 쇼핑몰 지정, 맘대로 쇼핑

## □ 현황 및 문제점

- 국회사무처는 '03년부터 '07년까지 직원들 피복비 지급을 위해 6억6천만원 지출

&lt; 03년부터 07년까지 예산 및 집행 현황 &gt;

(단위: 천원)

연 도	예산현액	본예산	전년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지출액
2007년도	160,121	145,970	0	0	1,987	158,134
2006년도	152,769	143,769	0	0	3,178	149,591
2005년도	138,217	105,693	0	0	2,690	135,527
2004년도	115,653	89,543	0	0	1,808	113,845
2003년도	102,548	75,042	0	0	1,233	101,315
	669,308	560,017	0	0	10,896	658,412

- '08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 본래 피복비(210-03목)는
- 국회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4(복장 및 제복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피복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 국회사무처는 대부분 복장에 아무런 제한도 없는 국제국·의사국 직원, 교육훈련 담당 직원, 속기사, 공보관·방송요원, 전화안내원, 후생관복지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가 평상시에 입을 수 없는 제복(유니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지원방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
  - 국회사무처는 대부분 마리오아울렛, 홈에버월드컵점 등 의류잡화 종합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9만원~20만원 상당의 교환권(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회사무처 복제규정 상 지급 대상 및 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단가	예산액	비 고
의사복	214	200	42,800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보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료조사원복	11	200	2,200	회의중 표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위복	67	200	13,400	경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유도복(2년1착)	“	46	1,538	경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속기사복	93	200	18,600	본회의 및 위원회의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방호원복(2착)	95	200	38,000	청사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방호방한복	“	200	19,000	청사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안내복(2착)	13	200	5,200	청사안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전복	39	200	7,800	의전 및 섭외업무에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등
연수복	18	200	3,600	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이하 공무원
작업복	150	60	9,000	기계원, 전기원, 전화수리원 등
공익요원	20	275	5,503	공익근무요원
방송요원	7	200	1,400	방송촬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보관실	3	200	600	사진촬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헌정기념관 참관 안내원	8	200	1,600	청사안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능직작업복(도서관)	10	50	500	기계원, 전기원, 전화수리원 등
도서관 안내원 근무복(3착)	7	200	4,200	청사안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b>합 계</b>	<b>755명</b>		<b>174,941</b>	

※ 지급기준이 '6만원'인 '작업복'의 경우, 금액이 너무 작다하여, 2년에 한번씩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연 9만원 지급'

- 이러한 옷값은 매년 755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현재 국회사무처 정원 1072명(피복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제외)의 70%에 해당.
- 이렇듯 피복비가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 연말에 '예산 털어내기'식 집행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 '07년도에는 59.1%를 4사분기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

< 03년부터 07년까지 분기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비 고	연간총 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12월 중 30% 이상 지출 사유
					10월	11월	12월	
2007년도	158,134	4,728 (3.0%)	13,573 (8.6%)	46,303 (29.3%)	6,238 (3.9%)	30,556 (19.3%)	56,736 (35.9%)	수요집중
2006년도	149,591	21,130 (14.1%)	42,810 (28.6%)	24,400 (16.4%)	48,770 (32.6%)	8,426 (5.6%)	4,055 (2.7%)	수요집중
2005년도	135,527	9,164 (6.8%)	29,413 (21.7%)	25,800 (19.0%)	3,568 (2.6%)	28,350 (20.9%)	39,232 (29.0%)	수요집중
2004년도	113,845	775 (0.7%)	30,211 (26.5%)	20,111 (17.7%)	3,602 (3.2%)	28,644 (25.1%)	30,504 (26.8%)	수요집중
2003년도	101,315	4,865 (4.8%)	23,679 (23.4%)	26,836 (26.5%)	520 (0.5%)	14,765 (14.6%)	30,650 (30.2%)	수요집중

□ 질의 및 대안

- 최근 5년간 국민혈세 6억원은 '피복비' 명목으로 하여,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의류 쇼핑을 지원하는데 쓰인 셈임.
-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음.
  - 올해 '저소득층 연탄 지원사업'을 보면, 흑한을 이겨내기 위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구입 지원 예산이 한 가구당 7만7천원에 불과함.
  - 지난 5년간 직원들 옷값으로 지원된 6억 6천만원이면,
  - 85,714가구가 추가로 연탄 쿠폰을 지원 받을 수 있고,
  - 1장에 360원하는 연탄 188만장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함.

- 
-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 모두 위치에 걸맞은 적절한 복장의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 차원에서 지출해야 할 일임.
    -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수행비서 역시, 복장기준이 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당연한 것임.
  
  - 국민들이 보기에 이러한 유형의 피복비 지원은 결국 국가예산으로 자기식구 옷값 대주기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
    - 즉각 “국회공무원 복제규정”을 개정하여 제복이 아닌 한 직원들의 옷값 지원을 중단하여,
    - 이로써 국민의 혈세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맞춰 집행되고,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06년부터 07년까지 집행 내역 >

< 2006년 >

월별구분	내용	구입처	금액(원)
1월	방송촬영요원복(7인)	(주)미켈란젤로	1,400,000
	기능직(원예원,기계원,운전원,건축원,전산원,전화수리원,전기원,편집원)(95인)	국회사무처(관리국)	8,930,000
	연수복(20인)	미켈란젤로(양평동점), 롯데백화점 상설할인점	3,400,000
	헌정기념관참관안내원복(4벌)	상록수유니폼	800,000
	의전복(남20,여10)	TNGT(구로마리오아울렛),AZZAT BABA(상암월드컵몰)	6,000,000
	사진촬영요원(3인)피복비		600,000
	1월합계		21,130,000
	2-5월합계		0
6월	속기사복(여)	(주)올란도	13,400,000
	방호원근무복	포센스어패럴	13,650,000
	넥타이(경위,방호원)	마패	2,960,000
	근무복(경위직원)	제일모직	11,200,000
	속기사복(남)	(주)마렌지오	1,600,000
	6월합계		42,810,000
7월	근무복(여경위,안내원)	데미안(주)	4,000,000
	헌정기념관참관안내원복(3벌)	상록수유니폼	600,000
	7월합계		4,600,000
	8월합계		0
9월	속기사복(여)	(주)올란도	1,200,000
	경위복, 방호원복	K.M.G 코리아	18,600,000
	9월합계		19,800,000
10월	와이셔츠	K.M.G 코리아	2,469,900
	의사복(여)	아이잡바바	19,600,000
	의사복(남)	(주)수림실업	18,200,000
	안내원복	본인터네셔널	2,500,000
	안내원복	본인터네셔널	6,000,000
	10월합계		48,769,900
11월	넥타이	성일직물	560,000
	표결사복	상록수유니폼	2,000,000
	공익요원자켓	(주)영원무역	3,553,000
	공익요원근무복상하 등 14종	세방상사	2,313,000
	11월합계		8,426,000
12월	근무용모자	삼진제모(주)	275,000
	속기사복(여)	(주)올란도	200,000
	헌정기념관참관안내원복(4벌)	상록수유니폼	1,792,500
	방한복(오리털)등3종	세방상사	699,600
	속기사복	(주)마렌지오	200,000
	방한복(외투)	(주)영원무역	888,000
	12월합계		4,055,100
	총계		149,591,000

< 2007년 >

월별구분	내용	구입처	금액(원)
1월	사진촬영요원(3인)피복비		450,000
	연수복(20인)	미켈란젤로(양평동점),롯데백화점삼설할인점	3,591,000
	헌정기념관참관안내원복(5벌)	본인터네셔널	687,500
	1월합계		4,728,500
	2월합계		0
	3월합계		0
4월	유도복	시너지통상	1,072,500
	4월합계		1,072,500
	5월합계		0
6월	의전복(남26,여25)	주식회사 원신월드,이현상설할인매장	10,200,000
	방호원 정모	삼진제모(주)	2,300,000
	6월합계		12,500,000
7월	안내원 근무복 3종	세명패션	2,173,600
	방호원 근무화	한진제화	4,655,000
	방호원 근무복 등 4종	포센스어패럴	7,819,500
	공익근무요원근무복 등 10종	세방상사	1,652,410
	7월합계		16,300,510
	8월합계		0
9월	숙기사복(여) 구입	(주) 올란도	15,400,000
	경위 근무복	(주)캠브리지	11,600,000
	안내원 근무복	세명패션	3,003,000
	9월합계		30,003,000
10월	경위근무복	디아	1,200,000
	방송촬영요원복(7인)	(주)미켈란젤로	1,400,000
	공익근무요원근무복등 14종	세방상사	1,637,640
	숙기사 정복(남자) 구입	(주)캠브리지	2,000,000
	10월합계		6,237,640
11월	방호원 근무복(남성정장)	K.M.G 코리아	19,000,000
	기능직사무원(위원회,국제국,의정연수원소속 제외), 방송원,안내원(전화), 후생사무원(83인)	(주)마리오	8,964,000
	안내원(전화), 후생사무원	(주)영원무역	2,592,000
	11월합계		30,556,000
12월	방한복	(주)영원무역	537,300
	위원회 의사복(남)	(주)마리오	14,200,000
	본회의 의사복(남)	(주)마리오	3,800,000
	근무용넥타이, 와이셔츠	성일직물	2,146,400
	근무용방한복	코오롱스포츠목동로데오점	1,100,000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등 12종	세방상사	665,490
	국회경비대원 운동복	(주)애니폴	9,951,000
	자료조사요원복	상록수유니폼	1,936,000
	숙기사복(여) 구입	(주) 올란도	600,000
	위원회 의사복(여)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월드킵점	18,800,000
	본회의 의사복(여)	(주)이랜드리테일홈에버월드킵점	3,000,000
	12월합계		56,736,190
	총계		158,134,340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등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국회사무처 연말구입 물품, 혼수용품 방불

12월 31일 하루 동안 1억 8천만원 어치 구입

와인냉장고, 휴대폰 구입까지 지원

10~12월 흑한기 앞두고 선풍기, 냉방기 구매

□ 현황 및 문제점

- '자산취득'은 매년 30억~4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 국회사무처의 최근 5년간('03년~'07년) 10월~12월 자금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말 자산취득비 집행의 문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음 확인됨.

<자산취득비 집행 문란 사례>

- 한겨울 초입에 선풍기, 냉방기 구입 사재기
  - 에너지 절약이 정부의 중점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흑한기 직전인 10~12월에 연례적으로 개인용 선풍기, 에어컨 등을 구입하여 사재기
  - '06년의 경우, 12월 31일 하루에만 좌석용 선풍기 6개를 구입

○ 무분별한 핸드폰 구입 지원

- 국회사무처는 공용 업무용 명목으로 휴대폰 55대를 구입, 지원하며 휴대폰 요금까지 납부.
- 이를 대외업무가 많은 의장실 등에 지급하는 것은 납득이 되나,
- 각 위원회, 실·국에까지 33개의 핸드폰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억원에 달하는 핸드폰 요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남.

(단위 : 천원)

년도	년, 휴대폰 요금	월 평균 휴대폰 요금	휴대폰 대수
2006	32,470	2,706	53
2007	34,972	2,914	55
2008.10	37,209	3,721	55
합계	104,651		

○ 연말구입 물품, 혼수가전 세트

- 특히 연말에는 사무가구, 노트북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용품 뿐만 아니라, 심지어 TV, DVD플레이어, 화분대, 탈수기, 식기건조기, 디지털카메라, 공기청정기, 가습기, 냉장고, 커피포트 등 혼수용품을 방블케 하는 물품을 개별 실·국 및 위원회별로 주먹구구식으로 구입
- '03년에는 와인냉장고까지 구입  
삼성전자, SWR-1450A(와인쿨러), 596\*853\*600mm, 36병 보관 가능.

○ 이러한 항목을 행정부 기관의 자산취득비 지출내역과 비교해보면, 국회의 자산취득비 지출이 얼마나 부적정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07년 중소기업청의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 사무용 자산을 취득할 시에는 필요수량을 전 부처차원에서 대량으로 계획 하에 구입.
- 커피포트, 냉장고, 선풍기, 소형난로 등 전열제품 경우, 구입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집행된 내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움.

○ 국회사무처의 낭비성 예산집행은 10~12월중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김태량 사무총장의 임기 마지막 회계연도인 '07년의 경우,

- 전체 예산의 46%를 10~12월 사이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과거 집행 사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산취득비 집행이 4사분기에 심하게 집중되어 있는 지출 형태.

(단위 : 천원)

비 고	연간총집행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0~12월 중 30% 이상 지출 사유
					10월	11월	12월	
2007년도	3,205,999	318,553 (9.9%)	1,110,228 (34.6%)	303,076 (9.5%)	99,496 (3.1%)	201,819 (6.3%)	1,172,827 (36.6%)	수요 집중
2006년도	4,075,888	278,370 (6.8%)	2,403,476 (59.0%)	680,954 (16.7%)	117,884 (2.9%)	122,121 (3.0%)	473,083 (11.6%)	
2005년도	3,297,281	280,522 (8.5%)	1,411,490 (42.8%)	655,566 (19.9%)	186,075 (5.6%)	408,027 (12.4%)	355,601 (10.8%)	

- 이를 구입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 '07년 12월 31일 하루동안 124건의 물품구입을 위해 1억 8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말 집행 잔액을 최대한 소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 이러한 국회의 자산취득비 집행은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 뿐 아니라, 『물품관리법』도 위반한 것으로 위법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08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 자산취득비(430-01목)의 집행시,
  -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국회사무처는 지침을 위반하여, 연례적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왔음이 밝혀졌음.
- 또한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물품의 정수 책정기준을 정하

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물품 등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물품의 정수 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대법원 및 헌법 재판소의 소관에 속하는 주요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물품 기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 조달청이 『물품관리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산취득을 관리하는 것은
  -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 물품의 내용연수와 정수를 정하고,
  - 세금으로 구입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임.
  
- 이에 국회사무처는 '08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통해서
  -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 단 한번도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만들지 아니했던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앞장서 그 자신이 만들어낸 법도, 내부 지침도 전부 무시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 전 정부부처를 통틀어 물품정수책정기준 마련하지 않은 곳은 국회 외에는 없으며, 사법부 역시 물품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주요 물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부처통합 등으로 기존 기준 조정이 필요한 곳은 제외)
  - 이에 조달청은 지난 5월 1회, 8월 2회 등 올해만 3번의 공문을 발송하여,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을 안내하고,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회사무처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복지부동.

## □ 질의

### ○ 사무총장님, 국민경제가 위기다.

- 행정부에 한발 앞서, 국회사무처부터 구태와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여 효용성 있는 국회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총장님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 ○ '07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 예산낭비 행태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지난 사무총장 재임 시 국회가 구매한 물품들은 혼수용품을 방블케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하고, 과연 이들 물품에 지출된 예산이 적법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 또한, 물품관리는 그 어느 정부부처도 이 이상 최악일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 총장은 국회사무처가 보유하고 있는 '06년도 이전이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실제 구입처 및 배치현황이 장부상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사실상의 물품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이며,
- 또한, 자산취득비로 인한 물품과 기타 소모품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혼용 관리되고 있어 면밀한 점검도 어려운 상태임.
- 누가보아도 일목요연하게 국회 물품관리실태를 알 수 있도록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함.

### ○ 아울러,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지출 관행역시 즉시 시정되어야 함. 이러한 무분별한 연말 자산취득의 잘못된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은 경상경비 절감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서 정한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잉여물품 보유, 불용품 관리 실태 등을 일괄 점검하여 적법성을 따지기도 불가능한 상황.

- 이는 그동안 국회가 관련 법령을 무시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무법'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 입법부인 국회가 더욱 '준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시급히 『물품관리법』상 '주요물품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법상태를 해소해야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기회로 물품관리에 대한 일제 자체감사를 시행하여, 전임 사무총장 재임시 물품이 불법적이고, 부적정하며, 과다하게 취득된 것은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즉각 보고해주시기를 당부한다.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국회사무처 등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 감사사각 지대, 낯뜨거운 국회 천태만상

## 국회사무처 직원부터 공직기강 바로 서야

□ 현황 : “범죄자 판치는 국회, 이를 조장하는 솜방망이 징계”

○ 대학교 공학사 학위 부정 취득 → 기소유예 → 국회 징계 없음

- 입사 이전 '07년 5월 중순경 대학교 학부 교수에게 금 80만원을 주고 만든 “졸업 작품”을 자신이 만든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평가받아 대학교 공학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드러남.
-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받았으나, 초범 등임을 인정받아 기소유예
-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국회통보일 : '08.2.28

○ 공공장소 성추행 → 벌금 100만원 → 1심 유죄판결, 현재 항소진행

- '08년 4월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함.
- 적용법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국회통보일 : '08.4.24

○ 해외 원정 성매매 → 기소유예 → 감봉 3월

- 해외여행도중 귀중에 외국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
- 해외에 나가 성매매를 한 뒤에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여 덜미를 잡힘.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

- 피의사실 인정받았으나, 국회감사관실에서 처분 예정인 것을 감안하여 기소 유예됨.
-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국회통보일 : '08.5.16

○ 강간치상 → 구속 → 당연퇴직

- 안양시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행인에 발각, 그 와중에 여성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함.
- 적용법조 : 형법 제301호, 제297호
- 국회통보일 : '08.7.9

○ 직위 과시 등 폭행 → 합의로 무혐의 처분 → 징계없음

- 피의자는 국회사무처 서기관으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 소속이 어디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면서 공무원증을 내보이고, 왼 주먹으로 얼굴부위 3회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내려 목덜미를 조른 후 뒤에서 밀어치는 등 폭행하였음.
- 범중 인정되나, 피해자가 합의를 제출하여 무마.
-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
- 통보일자 : 07.6.26

○ 이 외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행 등은 비일비재한 사건.

□ 문제점 및 질의

- 이번 자료를 받아보고, 국회의 일원으로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음.

<문제점1> 솜방망이 징계, 기강해이 부추긴다!

- '07년, '08년에만 국회가 검찰로부터 받은 '공무원범죄처분통고'가 무려 26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징계는 솜방망이

- 해당사항 중 징계된 건은 '해외원정 성매매'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단 1건이고, 그 수위도 "감봉 3월"에 불과.
-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관련자 주의조치,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고 강변.
-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징계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수준. 솜방망이 징계 관행 자체가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해이를 부추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공무원범죄처분을 통고받은 건수 >

구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상해	폭행	기타	합계
2007년	1건	4건 교통사고후 도주 등	1건	7건 동거인 폭행 등	5건	18건
2008년	2건	1건	-	1건	4건 성폭력 강간치상 업무방해 등	8건

<이중 징계건수>

구분	2007년	2008년
사무처	-	1건

※ 2008.6.12 징계건 : 품위유지의무 위반

- 상기인 ○○○은 개인관광 목적의 해외여행 중 현지 업소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는 바, 감봉3월로 의결.

○ 국회의 경우, '음주운전'은 징계위원회 안건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문제점2> 감사관실, 제식구 감싸기 도를 넘었다!

- 의원실 보좌진이 관련 자료 조사를 위해 '감사관실'과 수차례 통화하는 도중
- 감사관실 직원이 징계대상 직원들의 심리적 고통을 전달하며, 국회사무처 질 의에서 해당 내용을 빼줄 것을 요구하는 한심한 작태가 발생.

---

- 감사관실이 '변호인'처럼 행동하는 모양새인데, 이래서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 감사관실이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의 자체감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가 없었음.

- 국회사무처는 07년, 08년 감사원 회계검사 실시로 인해 자체감사를 생략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06년에는 '05년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어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함. 결과적으로 '이현령 비현령식 변명'으로 06년이후 단 한번의 자체감사도 실시하지 아니함.

○ 국회에 관련 예산안 심의를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소관 법령의 통과를 담당하는 '국회'는 감사원의 사실상 손대기 어려운 '성역'

- 때문에, 자체감사 시스템이 그 어느 곳보다 강도 높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대해 자체감사 강화, 감사관실 혁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 행정부 사례

- 행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점검은 명절, 선거시 최소 연 1회 이상 진행되고 있음.

- 자체감사는 수시로 보통 연 1회 정도 진행됨.

○ 국회사무처 기강을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고 생각하고, 사무총장직을 임해주 시기를 바란다.

-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첫걸음이다.

## ‘08년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 질의 목차

- 1)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 인권은 없고 촛불의 인권만 있다!!
  
- 2) 국군포로 560여명, 납북자 494명,  
관계가족 수천명!  
이들의 짓밟힌 인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3) 북한인권은 관심없고  
쌀퍼주기만 관심있는 국가인권위원회!!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 인권은 없고 촛불의 인권만 있다!!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 27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촛불집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설명자료 발표
-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시위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찰청장을 경고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에 대해 징계조치하고 방어위주의 경비 원칙과 시위현장 통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함.
-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일반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여 구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공권력의 피해나 일반시민들의 피해는 묵과하고 촛불시위의 피해만 확대 과장함.
- 인권위원회는 일반시민 및 공무원(예를 들면, 전경대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라고 밝힘.
- 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기관으로서 시위군중이나 진정

인들의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 없이 인권침해적 측면만 부각시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약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권고임.

- 공권력 피해 -

- 촛불시위로 인해 불법집회시위가 지난해 동기 대비 22건에서 66건으로 3배이상 증가 이중 54건이 촛불시위
- 경찰 및 의경의 공권력 부상도 07년 75명에서 08년 525명으로 450명 증가. 이중 촛불집회의 부상만 501명. 촛불집회에서의 부상은 시위대의 일방적인 집단 폭행으로 인해 대다수 중경상.

'07년 (1~8월)	'08년(1~8월)							전년대비 450명 증가 (↑600.0%)
	계	촛불집회(5. 2~8.15)			기타			
		소계	경찰	의경	소계	경찰	의경	
75	525	501	59	442	24	4	20	

- 장비 피해의 경우 지난해 71건에서 08년 촛불시위에서의 장비피해만 2,285건

'07년 (1~8월)	계	'08년(1~8월)							전년대비 2,214점 증가 (↑3118.30%)
		촛불집회(5. 2~8.15)						기타	
		계	차량	방석모	방패	무전기	기타		
71	2,285	2,275	177	368	213	112	1,405	10	

- 일반시민 피해 -

- 5월 6일부터 7월 23일간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종로 상인연합 128명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게 19억 5천만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
- 종로상인연합은 소송제기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소송 상인들을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영업방해와 전화를 통해 욕설을 듣는 등 2차 영업피해도 당함.
- 일부 기자들은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카메라를 빼앗기고 구타 당함

- 5월 6일부터 약 80여회에 가까운 촛불시위가 진행됨으로써 시위로 인한 불법도로점거로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음.

(집시법 제10조, 12조, 20조 등에 의하여 야간시위 및 도로점거 등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대해 자진해산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음)

### - 공권력의 부재 -

- 한미FTA 1차협상에 참여한 원정시위대는 워싱턴 경찰당국에게 시위용품으로는 플래카드용 '얇은 나무막대'만을 허용하고 경찰통제선을 침범할 경우 즉각 체포하며,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댈때는 발포까지 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경고함으로써 원정시위대는 경찰이 허가한 가두 행진시간을 지켰고 시위허가구역도 벗어나지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길까 봐 현지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까지 대동함.
- 그러나 촛불시위의 경우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사가 새총이나 죽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 지능적인 가해를 넘어 염산투척과 같은 살생의 위험이 있는 수준에 달함

### □ 질의 및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인권침해이고 조직화된 다수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과 폭력은 인권침해가 아닌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책임이 있었는가? 국가기관으로써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법과질서, 그리고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할 일인가?

- 
- 공권력이 잘못된 부분은 마땅히 지적받아야 하고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원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내야할 공권력마저 불법에 의해 구타를 당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목소리 큰 다수의 진정에 의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공권력이 인권침해의 주범이 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위해 불법을 주도한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인권위원회의 판단이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국군포로 560여명, 납북자 494명

관계 가족 수천명!

이들의 짓밟힌 인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 현황 및 문제점

- 정전협정 체결이후 현재까지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는 494명
- 총 3,811명의 피납자가 발생하였으나, 이중 3,310명은 피납 직후 북한에 의해 송환되었고, 7명은 2000년 이후 탈북하여 귀환함.

구분	계	어부	KAL기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11	3,710	50	25	6	20
귀환자	3,317	3,270	39	-	-	8
미귀환자	<b>494</b>	440	11	25	6	12

- 국군포로의 경우 정전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실종자수는 82,000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함

- 상당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 되어 있을것으로 추정하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
- 08년 9월 현재 560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북한은 납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입북자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의자체를 거부.
- 이에 따라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사확인, 상봉방식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인권위원회는 06년 12월 11일 발표한 ‘북한인권에 대한 기본입장 발표’에서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 당사자이므로 위원회가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수 있다고 명시함.
-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에 대해 외교문제를 거론하며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실례로 자료요청 단계에서 인권위원회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등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전가시킴

□ 질의 및 대안

- 현재 납북자 494명, 국군포로 560명 정도가 아직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납북자, 국군포로가 아니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 및 신념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들을 위해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북한인권은 관심없고  
살피주기만 관심있는 국가인권위원회!!

□ 현황 및 문제점

- 북한은 2007년 11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09년 1월 23일 심의를 앞두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NGO등이 당해 국가의 보고서가 허위로 보고되거나 조작, 또는 정보를 은폐한 부분을 찾아서 반박하고 실재를 반영한 대체보고서(Shadow Report)를 작성하여 실상을 알리고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로비활동을 함
- 또한 2009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UN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회의의 대상국이 북한임.
-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 없음.
-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 등 북한인권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2008년 6대 정책과제로 포함시키고 북한인권 포럼을 출범시킴. 그러나 16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포럼은 지난시기 북한인권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대부분이며 친 김정일 성향의 좌파단체 출신들도 포진해 있는 상황임.
- 북한관련 NGO단체들에게는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진정성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권위원회는 9월 30일 북한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책없이 인도주의적이라는 명분아래 식량지원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채택하여 10월 14일 통일부에 접수함.
-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대북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는 명분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실제적 필요성은 내부에서도 일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08년 제 19차 전원위원회 회의록 (2008년, 9월 22일)

“ooo 위원 : o 위원께서 식량이 120만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수집한 자료는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임. 120만 톤이 부족한데 미국에서 상당 부분 지원했고 중국에서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50만 톤이 가고 있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임.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북한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다가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여론에 밀려 졸속적인 대북 인권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임.

## □ 질의 및 대안

- 위원장은 내년 UN 인권부문에서 북한의 예정된 스케줄을 알고 있는대로 설명해 보라

- 
- 북한인권 자문기구인 '북한인권포럼'을 만들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중에 다수의 비전문가들과 과거 북한인권 거론 반대론자뿐 아니라 과거 친북좌파 단체 출신 인사들도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인권포럼'이 북한 인권에 대해 제대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고 정책도 없이 전시행정식의 포럼구성은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무용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 ‘08년 국정감사 대통령실

### 질의 목차

- 1) 저탄소 그린에너지 산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미래성장동력 산업,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 2) 바이오 (장수의학, 인공장기, 항노화)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필요!
- 3)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  
지역선도산업 선정, 백년대계의 청사진돼야
- 4) 지경부산하 13개 연구기관, 예산1조6천억 규모  
공기업 방만 경영 심각, 일대 조직쇄신 필요
- 5) 세계경제위기 원인 진단과 우리나라 대처방안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 주문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청와대 대통령실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 저탄소 그린에너지 산업의 컨트롤 타워 부재 미래성장동력 산업,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 □ 질의

1. 현재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화두는 저탄소 그린에너지의 개발과 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저탄소 그린에너지 개발을 책임질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린에너지와 무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까지 최근 환경산업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거나 직간접 예산을 대폭 늘린 상황임. 대통령실과 지식경제부가 이러한 사업의 컨트롤 타워이자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당장 에너지 분야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대통령실과 지경부가 위의 사례와 같은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과 지식경제부는 저탄소 그린에너지에 대한 확고한 개발 및 발전 전략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여 그것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청와대 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답변을 보니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존 정부조직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발전 등 기능 및 조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기능 및 조직들을 통합·조정하는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

---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12월을 목표로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직과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현안 및 문제점

-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과 같은 후속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야말로 말뿐인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인 상태

- 현재 모든 부처들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조금만 연관 있으면, 관련정책을 실시한다고 나서는 상황임.  
로드맵 없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 결국 재원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단적으로 그린에너지와 무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까지 최근 환경산업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거나 직간접 예산을 대폭 늘린 상황.

- 한마디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나 현상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못하는 구호성 정책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그린에너지 및 녹색성장의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그린에너지 산업의 선봉장이 되어야할 한국전력도 별반 나을 것이 없음

## □ 사례

-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제주도내의 화력발전소와 더불어 육지에서 15~30만kW의 전력을 해저케이블을 통해 전송하고 있음
-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그린에너지인 풍력발전의 최적지
- 현재 제주도에 풍력발전으로 3만 3천k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120만kW를 공급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를 건설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20만kW는 육지에서의 송전 없이 제주지역의 전력소요량에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전력량임
  - 제주지역 전력소요량 여름 :55~57만kW, 평상시 35~40만 kW
- 그러나 현재 제주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존지역으로 등재됨에 따라 송전선로의 건설을 지중화 해야 하므로 건설비용이 상승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초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렵게 됨.
-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이나 저탄소 그린에너지의 개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풍력 발전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나 경제성으로 인한 제약이 생김.
- 독일의 경우처럼 발전사업자가 송전선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풍력발전의 원가는 제주 소재의 화력발전 보다 더 값싼 생산단가임.
- 제주 소재 발전소의 평균 전력 생산단가 => 155~195원/kWh (2006년 기준)
- 풍력발전 차액보상 기준 단가 => 107.22원/kWh
- 건설회수비용 약20원/kWh정도를 더하여도 화력발전에 비해 저렴한 생산비용

**<제주지역 발전 단가>**

	발전량(MWh)	평균발전단가(원 kWh)
남부발전	1,229	201.2
중부발전	980	179.5

- 한전의 평균 판매 단가 => 80.7원kWh
- 제주지역 2007년 전력사업 손실액 약 2,448억 원
- 장기적으로 제주지역은 풍력 발전이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저탄소 그린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하며 경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또한 현재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경우도 육지에서 제주로의 일방향 전송만 가능한 상황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전은 육지와 제주의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해저케이블을 건설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풍력발전의 성장 가능성이 저평가되어 반영됨
- 현재 진행되는 해저케이블사업은 풍력발전이 성장할 경우 제주지역의 전체 소비를 충족시키고도 남는 양의 전기를 육지로 송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 위의 사례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개발 및 성장에 주력하고 선봉장이 되어야 할 한국전력이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데서 나타나는 단적인 예임.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청와대 대통령실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 바이오 (장수의학, 인공장기, 항노화) 산업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전략적 육성 필요!

### □ 문제점 및 질의

1.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수의학을 마치 의료, 복지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 지식경제부의 역할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전통산업 만이 아니라, 나노신소재 등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와 항노화 (안티 에이징), 장수의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서실장님의 견해는?

2. 우리나라도 예방의학과 전문의학 등 장수의학 메디컬 단지와 R&D 단지를 설립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관광레저와 세계적인 장수의학센터를 설립한뒤 전 세계의 돈 많은 고령 고객들을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항노화·장수의학과 관광레저가 융합된 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실장님의 의견은 ?

3. 21세기 대한민국 최고의 화두는 '경제강국'이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위하여 기술역량 확충이 필요하고,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 
4. 항노화(안티 에이징), 장수의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해답이다. 장수의학은 미래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며, 관광레저단지와 결합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우리나라와 부산경제 활성화의 핵심산업이 될 수 있다. 입지는 외곽이 아닌 도심에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심에 위치한 최적의 활용부지는 부산의 24만평 도심철도 기지창이다. 실장님의 견해는?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청와대 대통령실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 지역선도산업 선정, 백년대계의 청사진되어야

## □ 문제점 및 질의

1.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지자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수요조사(균형위, 7.30~8.31일)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 특화발전과 연계성, 국가계획에 부합성, 지자체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선정한 것임.

\* 수도권 3개, 4개 광역권 20개(4 × 5개), 2개 특별권 : 7개

현 정부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9건)

- \* 동북아제2허브공항, 서해선(화양-원시), 남해안 해양관광 연육교(마산-거제, 압해-압태, 화양-적금), 남북7축(포항-영덕),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실장님 !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기존의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차별화된 것입니까?

2. 선도프로젝트는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타당성조사시에도 경제성분석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 공법적용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임.  
재원은 향후 5년간('09~'13) 투자규모는 50조원에 수준으로 재정에서 25조원, 민자·공기업투자 등으로 25조원을 조달할 예정임.

○ 예산이 50조원이나 투입됩니다.

경기활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필요합니다.

30대 선도산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정된 것입니까?

○ 이명박 정부

- 세계 각국의 지역정책 광역화 추세에 맞춰 지역정책의 중점을 5+2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전환 추진

○ 99년부터 07년까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까지)

- “지역전략산업 선정” 등의 명목으로 지방 13개 시도에 2.3조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화에는 미흡한 결과 초래.

→ 지역의견수렴 등 협의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제시후('08.9) 일부 조정하여 확정('08.10)

-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발전 비전 제시

**Q. 미래기술을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한 이번 ‘선도산업’의 선정이 전략적이고, 적합했다고 보십니까?**

○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기존 지역전략산업 선정 역시,

- 지역별 전략산업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나 문제제기에 지속적으로 부딪혀 왔음.

- 유망한 미래 산업분야로 여겨지는 분야의 경우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결과, 전략산업간 중복, 전략산업 선정의 적합성 문제 등으로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온 것은 모두 주지하는 사실.

○ 예를 들어, 고성장이 전망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의 경우, 생물, 바이오 등의 분야로 13개 시도 중 광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도 없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국민혈세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임.

<대표적인 중복지원 분야 - 바이오, IT, 자동차>

중복지원 전략분야	지역(관련 전략산업)
바이오 (12개 지역)	서울(바이오), 대전(바이오), 충북(바이오), 경기(생명), 충남(축산바이오), 전북(생물), 대구(생물), 전남(생물), 제주(건강뷰티생물), 경남(바이오), 강원(바이오), 경북(생물한방)
IT산업 (10개 지역)	서울(정보통신), 대전(정보통신), 인천(정보통신), 충북(이동통신), 경기(정보통신), 충남(전자정보기기), 부산(영상IT), 대구(전자정보기기), 광주(정보가전), 경북(전자정보기기)
자동차 (4개 지역)	충남(자동차부품), 울산(자동차), 광주(자동차부품), 전북(자동차기계)

Q. 향후 5+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의 비효율성을 거울삼아

- 국가 전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함.
- 이에 대해, 청와대는 컨트롤타워로서 정확한 목소리를 내어,  
앞으로 세부프로젝트 발굴 (11월), 추진체계 마련(12월) 단계에서 사업이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고자료>

□ 30대 선도프로젝트 현황

-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지자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수요조사(균형 위, 7.30~8.31일)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 특화발전과 연계성, 국가계획에 부합성, 지자체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선정

\* 수도권 3개, 4개 광역권 20개(4 × 5개), 2개 특별권 : 7개

① 현 정부에서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9건)

- \* 동북아제2허브공항, 서해선(화양-원시), 남해안 해양관광 연육교(마산-거제, 압해-암태, 화양-적금), 남북7축(포항-영덕),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② 그간, 추진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광역경제권 발전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신규로 착공하는 사업(10건)

\* 원주-강릉, 부산-마산, 진주-광양, 동서6축(상주-영덕), 동서8축(함양-울산) 동서8축(함양-울산) 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 부산, 광주, 대구외곽순환등

③ 현 정부에서 착공하여, 집중적 재원투입을 통해 투자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갈 사업(10건)

\* 호남고속철도, 제2외곽, 제2서해안, 제2경부, 제2영동고속, 인천2호선, 원시-소사-대곡 복선전철,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및 교통시설 등

④ 기존에 발표된 계획이나, 새롭게 보완·추진하는 사업(1건)

\* 새만금개발(새만금 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 □ 향후 방향

○ 선도프로젝트는 국책사업으로 지정·관리하면서,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 타당성조사시에도 B/C 등 경제성분석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 공법적용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

○ 한편 재원은 향후 5년간('09~'13) 투자규모는 50조원에 수준으로 재정에서 25조원, 민자·공기업투자 등으로 25조원을 조달

#### < 연차별 투자규모(추정) >

(조원)

	'08	'09	'10	'11	'12	'13	계('09~'13)
▪ 국고	1.5	2.7	4.0	5.1	6.3	6.9	25.0
▪ 기타	1.2	2.3	4.1	5.2	6.3	7.1	25.0

○ 동 소요는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큰 무리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한 수준

- 공기업의 ABS 등 자체투자 활성화

- 토지은행을 설치, 5년간 10조원의 SOC 및 산단용지 공급

-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한 계속비 대상 확대 및 공공보증제 도입, 민자제도 (BTL, BTO) 등을 통해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

□ 5+2 광역경제권 관련, 지역선도산업 현황 및 예산안 등

○ 선도산업현황

- 지역 의견수렴 등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국가 신성장동력 제시 후, 조정하여 11월 초순경 최종 확정

권역	선도산업(예시)
수도권	금융, 비즈니스, 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	의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 광소재
제주권	물산업,관광레저
동남권	수송기계, 융합 부품·소재
대경권	에너지, 이동통신
강원권	의료,관광

\* 2008.9.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회의시 보고 자료

○ 선도산업 예산

-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선도산업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계
·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	2,017	3,000	4,000	5,000	5,000	19,017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특법개정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될 예정

\*\* 2008.9.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회의시 보고 자료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청와대 대통령실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지경부 산하 연구기관 13개, 예산1조6천억 규모  
공기업 방만 경영 심각, 일대 조직쇄신 필요

## □ 질의

## 1. 실장님!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은 산업기술연구회 포함 총 13개이며, 예산은 1조6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은 8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위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매우 심각합니다. 전반적인 조직의 쇄신 필요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08년 한해에만 연구비 총액이 무려 5,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의 내부에는 많은 부정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2005년 박모 직원이 직무관련 업체 미공개주식 부당취득으로 해임되었고, 2007년 장모씨도 2,900여만원의 주식을 수뢰한 부정처사로 해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연구원임을 자랑하는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2. 국내 최고의 연구원이라고 자랑하는 연구원에서 논문표절, 금품요구 등의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3.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광업진흥공사, 가스공사 등 많은 공기업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조직의 일대 쇄신이 필요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시오.

## □ 현황 및 문제점

### 1. 전자통신연구원 사례

2008년 연구비: 5,300억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4년 퀵컴에서 공동연구로 되받은 특허료 298억원중, 90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적발  
전 직원 2,209명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최고 870~175만원 지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수억원대 금품수수 등 부정사례 빈번  
검찰수사 7건, 민원사항 2년 12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시급

### 2. 한국가스공사 : 감사건수 2003년 이후 현재 834건, 173억원 회수 사문서위조, 폭행, 업무태만 등 징계받은 직원 총 45명 검찰 입건 총 6건

### 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년 예산 8800억원, 감사적발 건수 46건, 530억원 지적,

## 국회 운영위원회 '08년 국정감사

청와대 대통령실 소관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7호 Tel. 02)788-2450

## 세계경제위기 원인 진단과 우리나라 대처방안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 주문

## □ 질의

1. 폴 새뮤얼슨 MIT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을 두려워 하지 말고,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로 실업난을 해결하고 공공사업을 확대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부동산버블과 파생상품이라는 금융공학이 결합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총액은 1경 2천 조원 (약12조 달러)이며, 이 가운데 약 20~30%가 부실로 추정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7,000천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총 부실대출금액은 2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사태는 위에서와 같이 부시 정권의 느슨한 규제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의식 없이 레버리지(차입)기법 확대로 부실이 커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기하락, 금리상승, 그리고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장님,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3. 위와 같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내년에는 전 세계 경기가 실물경기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도 실물경기 하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 SOC 확대, 적극재정으로 정부지출 확대, 그리고 기업투자 확대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 현황 : 미국경제위기 원인 진단

#### ○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 (Sub Prime Mortgage)

- 신용도가 낮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비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 및 그 회사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 프레디맥, 패니매,

대출 총액: 1경 2천조 원 (약12조 달러)

약 20~30%가 부실로 추정됨.

⇒ 최근 미국에서 7,000천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총 부실대출은 2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 정식명칭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도가 낮은 만큼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 과거 우리나라에서 카드대란 당시 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발급해준 것과 같은 상황임.

- 빚 갚을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 □ 주택담보대출사태

- 주택가격 하락, 이자율 상승 등으로 대출받은 서민대부분이 이자상환능력이 없어 자산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함.

- 많은 주택이 압류 저당사태로 발전되고, 이런 회사들은 저당잡은 물건만 보유. 이 회사도 자금압박을 받고, 회사가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을 갚지도 못하자 회사자체가 연쇄 부도가 일어나 경제가 어렵게 된 것

## □ 미국 경제 침체원인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됨.  
모기지대출 회사가 대출해준 채권을 담보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보채권(MBS)로 발행하여 매각. 미국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이 MBS를 담보로 파생상품화 하여 또 다른 금융기관에 매각함.
2. 자동차 산업 퇴보로 생산성하락 이로 인해 실업률 증가
3. 실업률 증가로 주택이자 상환 못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원인)
4. 이라크 전쟁의 장기화로 전쟁비용과다 지출
5. 석유메이저(대형회사)들의 유가 폭리정책
6. 미국 투자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연쇄도산 (베어스스텐사 도산, 메릴린치 매각, AIG 긴급구제 금융), 서민경제 급락
7. 미국산업의 구조변화,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과정에 일자리 창출이 안된점

## □ 경기하락

-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 전쟁 중이며 전쟁에 사용되는 돈이 엄청나자,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하락이 아닌 경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 □ 경기회복 시기

- 이런 경기가 좋아 질려면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 합니다. 미국경제가 어려워지면 중국 일본 한국은 자연스럽게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캐나다는 감기에 걸리고 한국은 몸살로 드러누워 버리게 되는 취약한 한국경제는 영향이 많다.

## □ 물가상승원인

- 석유가 인상으로 한국은 원유도입비용 이 수배로 인상되고 한국산업이 석유에 의존하는 석유화학제품류가 가격인상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된 것입니다

---

## □ 곡물가 인상이유

1. 세계인구가 증가한 원인
2. 중국, 인도 등 곡물 소비국가 들이 인구 대폭증가와 비축량 사재 기
3.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곡물생산량 감소.
4. 옥수수 등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옥수수기름으로 석유를 대체한다는것)를 생산하는 곡물회사들의 사업계획이 본격 가동  
이런 이유로 곡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음

## □ 2008년 현상

- 이런 경제상태로 2008년에 접어들자 프라임 모기지에 너도나도 투자한 대형 투자회사들이 상환금 회수를 못하게 되자, 최근 리먼 브라더스라, 메릴린치 등 초 대형 투자회사가 인수·합병됨.
- AIG라는 미국 최대 보험회사는 미국 은퇴자연금 관리를 하여왔는데 이회사도 모기지 사태에 안전할 수가 없어 부도직전에 미 연방 정부가 구제금융 8조5천억 원을 해준 것 임.

## ‘08년 국정감사 이종혁 의원 언론보도



## 국회 사무처는 경제위기 무풍지대?

“예산 남겨봐야”...

**12월31일 124건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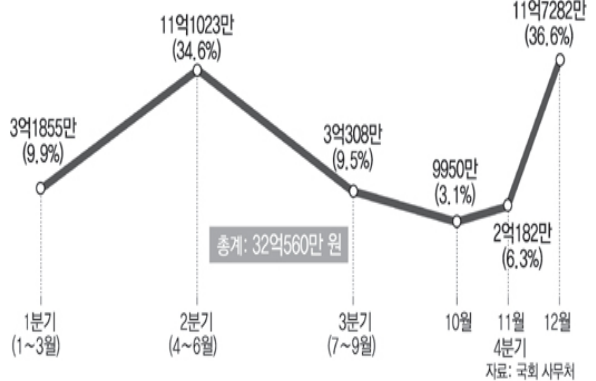
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 등  
품목도 다양

피복비 대상 아닌  
직원에도 쇼핑몰 쿠폰

폭행-성매매 물의 빚어도  
'숨방망이 징계'

작년-올해 예산 집행  
뜯어보니

국회 사무처의 지난해 자산취득비 집행 실적 (단위: 원)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지하복도에 사용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 국회사무처의 사무용 가구가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쌓여 있다. 전영한 기자

국회 사무처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허술한 인력 관리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회 사무처는 입법기관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 예산 밀어내기=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3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처는 자산취득비 32억 원 가운데 46%를 4분기(10~12월)에 썼다.

특히 12월에만 11억7200만여 원을 지출해 한 해 예산의 36.6%를 연말에 집중 사용했다. 12월 31일에는 하루에 124건의 물품을 사는 데 1억8000만 원을 쓰기도 했다.

4분기 구입목록에는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자전거 등 일반 행정부처에서 보기 어려운 물품은 물론 선풍기도 들어 있어 남은 예산을 연말에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다.

더욱이 국회 사무처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 책정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하지만 여태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달청은 5월에 1번, 8월에 2번 공문을 발송해 '주요 물품 정수 책정기준'을 안내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사무처는 또한 제복 착용자에게만 주도록 한 피복비를 전체 직원의 70%(755명)에게 지급하면서 2003년 이후 5년간 6억58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비 지급 대상에는 제복이 필요 없는 국제국이나 의사국, 교육훈련 담당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9만~20만 원 상당의 쇼핑몰 쿠폰으로 피복비를 지급받았다. 제복이 아닌 일반 의류를 사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1월 의원실 집기를 교체하면서 세트당 200만 원짜리 책상과 개당 69만 원인 의자를 들여 놓느라 7억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만한 직원 관리=국회 사무처는 이처럼 예산 낭비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관리도 허술해 잘못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 하지 않았다.

사무처 직원 A 씨는 지난해 다른 사람이 만든 대학졸업 작품을 본인이 제작한 것처럼 속여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이 올 2월 뒤늦게 국회에 통보됐지만 국회 차원의 징계는 별도로 없었다.

B 씨는 5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적발됐지만 감봉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에 앞서 서기관인 C 씨는 작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다. 하지만 사무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국회에 통보한 사무처 공무원의 범죄처분 사례는 지난해 18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8건이다. 이 중 국회 차원의 징계를 받은 건 1건에 불과하다. 행정부 공무원은 음주운전만 적발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과 비교하면 국회가 지나치게 제 식구를 감싸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무처 당국자는 "앞으로 범죄처분 통보자 처리 절차 및 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처리하려고 한다"며 "지난달에는 음주운전 처분규칙을 마련해 그 뒤부터 관련 범죄가 근절됐다"고 말했다.

---

▽견제의 사각지대=국회 사무처의 이 같은 실태가 좀처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만 회계검사에 국한된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어서 입법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수 없다. 국회 차원의 자체 감사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2006년 이후 3년 동안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견제도 유명무실한 편이다.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1년을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다. 사무처의 속사정을 알만 하면 운영위원장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사무처에 메스를 들이대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 국회사무처 직원 의류쇼핑에 6억원 혈세 낭비

박민선 / 2008-10-30 14:41

국회사무처 의류쇼핑에 국민의 혈세 6억원이 낭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피복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사무처 정원 1072명의 70%에 해당하는 755명이 매년 의류 교환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본래 피복비는 국회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4(복장 및 제복 등)에 의거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있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대부분 복장에 아무런 제한도 없는 국제국.의사국 직원, 교육훈련 담당 직원, 속기사, 공보관.방송요원, 전화안내원, 후생관복지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

이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가 평상시에 입을 수 없는 제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지원방식'에서 잘 드러났다.

국회사무처는 대부분 마리오아울렛, 홈에버월드점점 등 의류잡화 종합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9만원~20만원 상당의 교환권(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렇듯 피복비가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연말에 '예산 털어내기'식 집행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07년도에는 59.1%를 4사분기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불법적 지원은 '국회공무원 복제규정'이 과거 속기사, 의전 등의 사무처 직원들이 단일한 복장 착용을 강요받던 시기에 만들어졌으나 최근 5년간 국민혈세 6억원이 '피복비' 명목으로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의류 쇼핑을 지원하는데 쓰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 모두 위치에 걸맞는 적절한 복장의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 차원에서 지출해야 할 일"이라며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수행비서 역시, 복장기준이 극히 보수적일 수 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즉각 '국회공무원 복제규정'을 개정, 제복이 아닌 한 직원들의 옷값 지원을 중단해 국민의 혈세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맞춰 집행되고,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사무처는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

2008년 11월 04일 (화) 09:51:21

국회일보 webmaster@ighnews.com

국회사무처 직원들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전혀 관계없음

[국회일보=인터넷팁] 국회 사무처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허술한 인력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3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처는 자산취득비 32억 원 가운데 46%를 4분기(10~12월)에 썼는데, 특히 12월에는 11억7200만여 원을 지출해 한 해 예산의 36.6%를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특히 4분기 구입목록에는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자전거 등 일반 행정부처에서 보기 어려운 물품은 물론 선풍기도 들어 있어 '남는 예산을 연말에 소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국회 사무처는 제복 착용자에게만 주도록한 피복비를 전체 직원의 70%(755명)에게 지급하면서 2003년 이후 5년 간 6억58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밖에 1월 의원실 집기를 교체하면서 세트당 200만 원짜리 책상과 개당 69만 원인 의자를 들여놓느라 7억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국회 사무처의 이 같은 실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감사시스템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물론 감사원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회계검사'에 국한될 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직무감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2006년 이후 3년 동안 종합감사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자체 감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사무처에 칼날을 들이대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라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 국민이 국회 직원 의류쇼핑 지원한 꼴

국회사무처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직원들 '옷값' 지급을 위해 6억6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혁(부산 진구 을)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피복비 지원은 결국 국민들에게 국가예산으로 자기 식구 옷값 대주기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2008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국회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4(복장 및 제복 등)에 의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하게 되었으며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는 확대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들 모두 적절한 복장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 경비 차원에서 지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피복비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가 평상시에 입을 수 없는 제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방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대부분 '마리오 아울렛', '홈에버월드 킵점' 등 의류잡화 종합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9만~20만원 상당의 교환권(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옷값은 현재 국회사무처 정원 1072명의 70%에 해당하는 755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연말 '예산 털어내기'식 집행을 연례적으로 반복하게 되고 지난해에는 59.1%를 4사분기에 한꺼번에 지출하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혁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혈세 6억원이 '피복비' 명목으로 하여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의류쇼핑을 지원하는데 쓰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종혁의원 "국회사무처, 직원 옷값에 6억 낭비"

기사입력 2008-10-30 13:29

양혁진 yhj@asiaeconomy.co.kr

국회사무처 직원 옷값에 국민혈세 6억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피복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사무처 정원 1072명의 70%에 해당하는 755명에게 매년 의류 교환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피복비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국회사무처는 대부분 복장에 아무런 제한도 없는 국제국·의사국 직원, 교육훈련 담당 직원, 속기사, 공보관·방송요원, 전화안내원, 후생관복지원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는 대부분 마리오아울렛, 홈에버월드킵점 등 의류잡화 종합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9만원~20만원 상당의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평상시에 입을 수 없는 제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러한 유형의 피복비 지원은 결국 국가예산으로 자기식구 옷값 대주기 차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면서 "국민의 혈세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맞춰 집행돼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종혁 "북한에 국군포로 560여명 억류 중" 국가인권위 책임 전가 말고 송환 대책 마련해야

2008-10-30 14:08:04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얼마나 될까?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총 3811명의 피납자가 발생, 이중 3310명은 피납 직후 남한으로 송환됐고 7명은 2000년 이후 탈북하여 귀환했으며 미귀환자는 군경 25명, 어부 440명을 비롯하여 총 49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군 포로의 경우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된 국군 실종자수는 8만 2000명이나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은 국군 포로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560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북한은 납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입북자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군 포로,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사 확인, 상봉 방식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에 발표한 '북한인권에 대한 기본입장 발표'에서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위원회가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외교 문제를 거론하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권위원회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납북자 494명, 국군포로 560명 정도가 아직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납북자, 국군 포로가 아니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 및 신념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들을 위해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둘러 이 분들이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종혁 "북한에 국군포로 560여명 억류 중" 국가인권위 책임 전가 말고 송환 대책 마련해야

2008-10-30 13:48:11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얼마나 될까?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총 3811명의 피납자가 발생, 이중 3310명은 피납 직후 남한으로 송환됐고 7명은 2000년 이후 탈북하여 귀환했으며 미귀환자는 군경 25명, 어부 440명을 비롯하여 총 49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군 포로의 경우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 실종자수는 8만 2000명이나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상당수의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은 국군 포로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560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북한은 납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입북자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군 포로,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사 확인, 상봉 방식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에 발표한 '북한인권에 대한 기본입장 발표'에서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새터민 등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므로 위원회가 이들의 개별적 인권사항을 다룰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외교 문제를 거론하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인권위원회는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등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납북자 494명, 국군포로 560명 정도가 아직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납북자, 국군 포로가 아니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 및 신념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들을 위해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둘러 이 분들이 우리나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